

10년내 모든 부대 드론봇 전력화... 비행소음 등 극복과제

Q 르포 |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가보니

육군은 지난 16일 국방부 출입기자 및 군관련 전문가들을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으로 초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육군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줬다. 이번 초청행사는 종래의 재래적 전술과 병력소모적인 육군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켰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에 비해 현실적인 세심함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겼다.

◆육군의 3대 미래형 전투체계 공개

이날 행사는 육군이 추진 중인 3대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 ▲드로봇전투체계 ▲위리어플랫폼 등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육군은 오는 2040년까지 보병을 비롯한 전투병과와 전투근무지원부대에 아미타이거4.0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미타이거 4.0은 방호력과 기동력을 갖춘 전투차량으로, 병력을 기동시켜 전투간에 인명손실을 줄이는 개념이다. 기존 기계화보병이 보병전투차량으로 기동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아미타이거 4.0은 드론봇을 통한 정보·통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더해져 아군의 생존성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 관계자는 "인제에서 240km 떨어진 평양까지 도보 평균 시속 4km로 이동하면 무박으로 3일 밤낮이 걸리지만, 기동화가

아미타이거 4.0 등 전투체계 공개 인제~평양 이동 3일→3시간 단축 차륜형 장갑차로 야전지휘소 설치

드론봇으로 전장지형 정보 탐색 위리어플랫폼 장착 전투원 투입 입체적·융합적 전투능력 보여

이뤄지면 시속 80km의 속도로 3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투전막을 세우고, 구성물자를 적재했다가 재배치해야 하는 야전 지휘소도 정보·통신 장비를 갖춘 차륜형 장갑차로 간단하게 세울 수 있다.

드론봇은 무인기인 드론과 로봇을 합친 개념으로, 유·무인 혼합으로 운용되는 전투체계다. 육군은 2025년까지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요 부대에 드론봇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봇의 개념이해를 돕기 위해 육군은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전문기업 보스던다인내믹스의 '견마로봇', 한화디펜스의 '다목적 무인전투차량'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LG넥스원의 '정찰·타격 복합형드론', 국방과학연구소(A



육군은 지난 16일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으로 기자들을 초청해 육군의 3대 미래형 전투체계를 소개하고 설명했다. 전시된 전투차량과 드론봇들. /문형철 기자

DD)의 '자울터널탐사로봇' 등의 시연을 보였다.

◆전장에서 입체적이고 융합적으로 발휘되는 전투능력

육군은 마일즈 훈련 시범을 통해 3대 미래형 전투체계가 전장에서 입체적이고 융합적으로 전투능력을 발휘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마일즈 훈련은 비살상용 레이저와 센서를 이용해, 훈련 중인 전투원과 전투장비의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훈련 체계다.

하늘에선 드론봇이 전장지형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된 정보를 기동화된 지상 부대에 전파한다. 전투차량에서 하차한 전투원들은 광학장비를 부착한 개인화기와 향상된 개인방호장비로 구성된 '위리어플랫폼'을 장착한다. 전투원들

의 시가지 진입과 함께 지상과 하늘의 드론봇이 건물내 적 정보와 지원사격을 제공한다. 그야말로 입체적이고 융합적인 전투능력이었다. 전투원의 생존성을 높이려는 육군의 고민이 엿보이는 전투 시범이었다.

◆큰 미래에 대한 준비만큼, 현실에 대한 진화형개선은 안 보여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해결이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행사에서 육군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온 것을 느꼈지만, 그동안 야전과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의 개선은 여전히 미비했다.

우선 K2소총을 발사하는 드론의 경

우, 어느 정도의 정숙성과 휴대탄약을 가지고 적을 제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수많은 드론봇이 하늘을 비행하게 되면, 핵심 표적을 공격하는 공군과 지상의 포병화력의 공격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소음이 발생할 경우 적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더욱이 안정적인 자세와 적은 장탄수는 비용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먼저 눈을 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투시범을 보인 장병들에게는 시가전의 기본장비 중 하나인 '브리칭 장비'가 없었다. 이 장비는 잠긴 문이나 폐쇄된 공간을 극복하는 장비다. 위리어플랫폼의 29종의 구성품 중 전투원의 생명과 직결된 방탄복은 설계상의 결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채 확대보급될 계획이다. 시범과 설명 중 장비에 대한 잘 못된 이해로 엉뚱하게 사용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지막으로, 육군이 꿈꾸는 강력하고 똑똑한 지상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최저가입찰과 부실조달을 부추기는 현행 국가계약법과 조달체계, 무리한 국산화와 한국형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이 육군의 미래를 위해, 현실의 장애물을 걷어줘야 가능한 일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oul.co.kr

전기요금 오르나... 오늘 4분기 인상여부 발표

한전, 유가상승·적자 등 명분 충분 코로나·대선 등 영향 소폭인상 예상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를지 주목된다.

국제유가 상승 등 전기요금 생산원가 상승과 한국전력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전기요금을 올릴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자칫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민감해진 여론 등을 고려해 올린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해 23일 오전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유류 등 전력생

산 원가에 영향을 주는 연료비 주기적으로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 생산 비용이 커지면 요금도 올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아직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올 1분기엔 전기요금을 조정 상한선인 1kWh당 3원 내렸고, 2분기엔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을 1kWh당 2.8원 올려야 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물가상승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정부는 3분기에도 비슷한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전기요금 인상 권한이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는만큼 연료비 연동제는 시행 첫해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연료비 원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은 상반기에만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4분기엔 연료비 증가나 한전 적자 규모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쪽에 무게가 실린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 중 하나는 한전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의 최근 52주 중 1톤 당 최저 가격은 작년 9월 18일 53.66달러다. 하지만 약 1년 뒤인 올해 9월 17일 52주 최고치인 182.6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도 지난 17일 기준 배럴당 73.06달러로 작년 11월 2일(36.3달러)과 비교해 약 2배 올랐고, 연초와 비교해도 39.19% 급등했다. LNG 가격은 올해 4월 주춤했다가 5위 상승세로 전환해 6월 459.7달러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또 다시 유보할 경우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으로 전망되는 한전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한전 누적부채는 작년 132조4753억원에서

올해 142조1354억원으로 1년 만에 9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조정되는 요금은 최대 1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다. 1kWh당 3원 인상되면 월평균 350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은 월 1050원 오르게 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가 물가관리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결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전에 들어서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물가상승폭이 잡히지 않을 경우 야당의 여론전과 그로 인한 표심 이탈 등이 전개될지도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동결을 고심하는 이유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서 한국 국가식량계획 등 소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9시(뉴욕시간) 영상회의로 개최되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리 국가식량계획을 소개하고 식량 자원에 대한 국제협력 의지를 표명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선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식품에 희망이 있다(In food, there is hope)"면서 푸드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과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유엔 사무총장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축산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만전

농식품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정부가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올해 추석 연휴기간과 직후에도 축산농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을 미리 편성했다.

또 지난 18일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며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등 가용한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전국 축산농장 등 약 27만개소 대상 일제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에 다시 한번 전국 일제 축산 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 9월과 작년 10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경기도와 강원도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음을 고려해 추석 연휴기간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매일 상황근무자를 통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기관별 홍보 실적, 소독 등 방역추진 실적을 점검해 연휴기간 동안 방역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세종=한용수 기자